

일본의 우정사업 민영화

Japan's Privatization Policy on Postal Service

전황수(H.W. Chun) 정보기반연구팀 선임연구원

2001년 4월 고이즈미 후보가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어 총리에 취임한 후 국민 지지를 기반으로 우정 3사업(우편, 우편저금, 간이보험)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2001년 1월부터 시작된 행정개편에서 우정사업을 총괄하였던 우정성이 자치성, 총무청과 함께 총무성으로 통합되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민영화를 통해 우정사업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반대론자들은 전국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다는 반박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행정개편에 따른 우정사업의 변화, 민영화에 대한 찬반논리와 향후 전망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I. 서론

2001년 4월 고이즈미 총리가 모리 총리의 퇴진으로 인한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당내 기반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압승을 거두어 총리에 취임한 후 국민의 높은 지지를 기반으로 우정사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1990년대 초부터 우정 3사업(우편, 우편저금, 간이보험)의 민영화를 일관되게 주장해왔고, 이번 자민당 총재선거에서도 우정사업의 민영화를 제일의 개혁테마로 제기할 정도로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1년 1월부터 시작된 행정개편에서 우정사업과 정보통신, 방송부문을 총괄하였던 우정성이 자치성, 총무청과 함께 총무성으로 통합되어 관할부서의 변화와 함께 민영화를 둘러싼 찬반대립, 추진일정과 방법에 대한 논란으로 최근의 일본정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우편저금과 간이보험은 380조 엔의 자금잔고로 일본 전 개인금융자산의 3할을 초과하며, 재정투융자의 재원이 되고 있다. 고이즈미의 우정 3사업 민

영화 안은 민간기업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우정사업은 불필요하고, 민영화하면 거대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가 2~3년 내에 은행의 불량채권 처리 등 긴급경제대책을 실행하여 경제·산업 재생을 도모할 수 있다는 효율성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반면, 우정관계자 및 우정노조, 우정족의원 등 민영화 반대론자들은 민영화를 할 경우 전국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자민당 내에서는 선거에서 강력한 집표 머신이 되는 특정우편국장에 의지하는 우정족의원을 중심으로 이해관계가 엇갈려 통일된 의견안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고에서는 우정성의 개편을 중심으로 우정사업의 변화를 살펴보고, 고이즈미 총리의 우정사업 민영화 방안, 찬반논리와 향후 전망 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II. 우정성의 개편

1. 우정성의 개편

2001년 1월 일본의 중앙부처 재편성이 실시됨에 따라 우정성은 총무청, 자치성과 함께 총무성으로

로 통합되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대신 산하에 대신을 보좌해 정책기획입안, 정부처리를 담당하고, 대신부재의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부대신(2명), 특정의 정책이나 기획에 참가하는 대신정무관(3명), 사무차관, 차관급의 총무심의관(3명)을 두게 된다. 그리고 현재의 우정심의관은 총무심의관 포스트로서 변경되었다[1].

총무성의 대신관방은 각 성청의 관방을 통합하여 비서관, 총무과, 회계과, 기획과, 정책평가광보과의 5과가 설치된다. 우정성의 총무심의관은 총괄심의관으로, 또한 기술총괄심의관, 통신정책, 방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심의관 두 자리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총	무	성
대	대	신
부	신	(2)
대	신	정 무 관 (3)
사	무	차 관
총	무	심 의 관 (3)
대	신	관 방
관	방	장
총	괄	심 의 관
기	술	총 괄 심 의 관
심	의	관 (2)
총	괄	관 (2)
인	사	· 은 급 국
행	정	관 리 국
행	정	평 가 국
자	치	행 정 국
자	치	세 무 국
정	보	통 신 정 책 국
총	합	통 신 기 반 국
우	정	기 획 관 리 국
통	괄	관 (1) ※
※	공	사 이 행 준 비 담 당
통	계	국
공	정	거 래 위 원 회
공	해	등 조 정 위 원 회
우	정	사 업 청
소	방	청

(그림 1) 총무성 조직도

그리고 기존의 텔레컴3국(통신정책국, 전기통신국, 방송행정국) 중 통신정책국과 방송행정국이 정보통신정책국으로, 전기통신국과 관방국재부가 종합통신기반국으로 재편성되었다. 우정사업3국(우무국, 저금국, 간이보험국) 및 대신관방3부(인사부, 재무부, 시설부)는 제도의 기획입안, 경영의 기본적인 사항 등에 관한 기능을 가지는 우정기획관리국과 실시 에 관한 기능을 가지는 외국(外局)의 우정사업청으로 편성되었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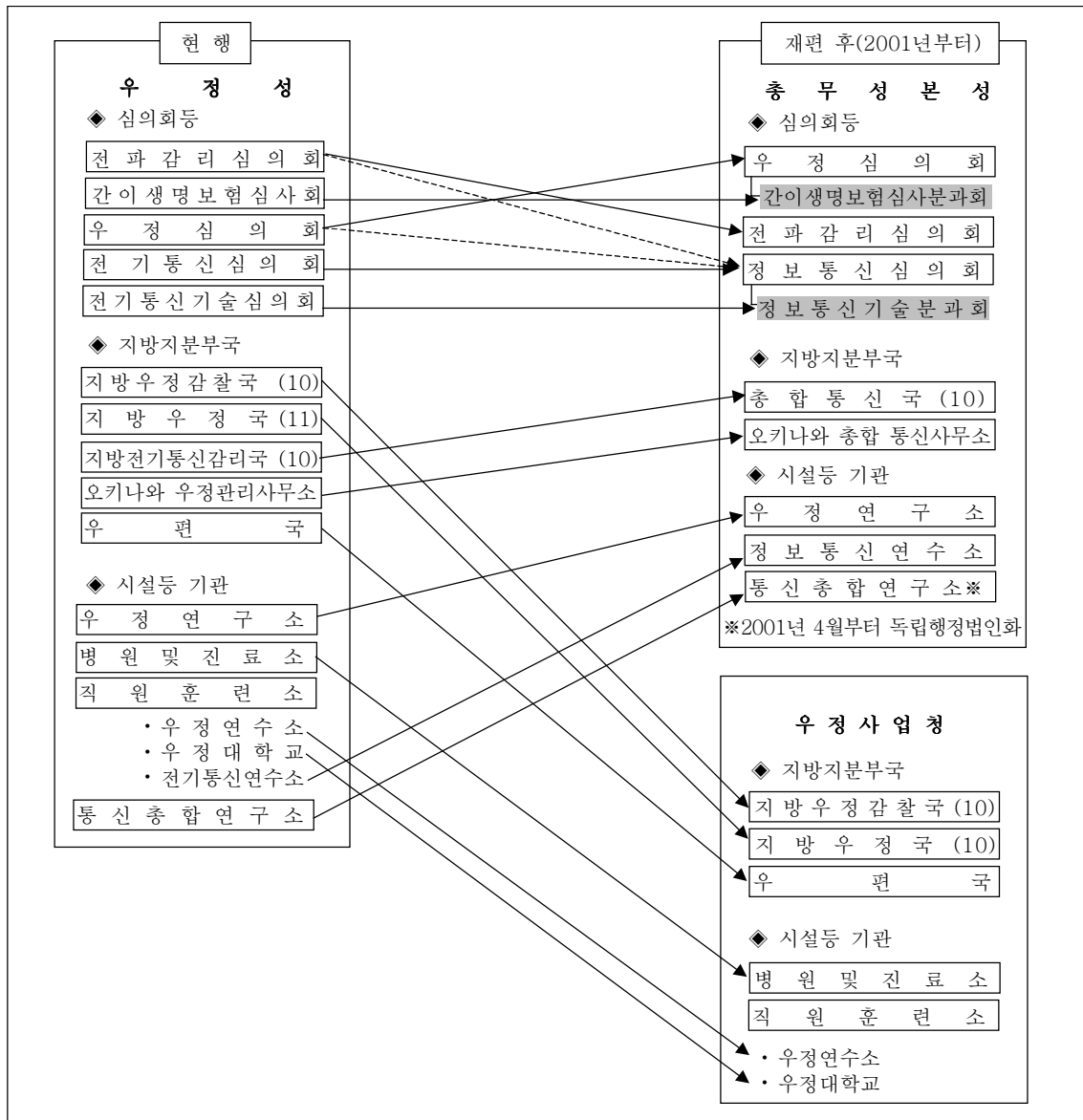
2. 우정관련 주요 조직의 편성

(그림 2)에서 보듯이 우정기획관리국에는 기획과나 경영계획과 등의 사무가 이행되고, 또 우정사업청은 장관, 차장의 산하에 총무부, 우무부, 저금부, 간이보험부, 시설·정보부가 설치되었다(총무부장은 차장이 겸임). 현재의 인사부는 총무성 본성과 우정사업청의 총무부로, 각 사업국은 우정사업청의 각 부로 재편, 재무부와 시설부는 시설·정보부에 거의 대응하는 것이다.

2003년으로 예정된 우정사업청의 우정공사로의 원활한 이행을 준비하기 위해, 공사 이행까지의 임시 조직으로서 국장급의 통괄관이 설치되고, 공사이행 준비조직이 약 70명으로 구성되었다. 우정성 관계과의 수는 기존의 68과(대신관방 포함)에서 59과로 재편성(총무성 전체로는 107과. 우정성, 총무청, 자치성의 합계. 공정거래위원회와 공해등조정위원회 분은 제외) 되었다. 정보통신정책국에 14과, 종합통신기반국에 14과, 우정기획관리국에 11과, 우정사업청의 총무부, 우무부, 저금부, 간이보험부, 시설·정보부에 각 4과의 20과로 재편성되었다[3].

재편 후 정원수는 대신관방이 345명(이중 우정성으로부터의 이행 분은 120명), 정보통신정책국이 275명, 종합통신기반국이 3,217명, 우정기획관리국이 460명, 우정사업청이 1,455명 등으로 책정(공사이행준비조직의 70명은 제외)되었다.

한편, 기존 우정성 관계 심의회 중에서 진과감리심의회, 우정심의회는 그대로 존속되었고, 간이생명보험심사회는 우정심의회의 간이생명보험심사분과



(그림 2) 우정관계 조직의 재편(심의회등)

회로, 전기통신심의회는 정보통신심의회로(전과감리심의회, 우정심의회 일부 심의사항을 이관), 전기통신기술심의회는 정보통신심의회 정보통신기술분과회로 이행되었다.

시설등기관의 우정연구소, 통신종합연구소는 총무성본성의 시설등기관으로, 직원훈련소의 전기통신연수소는 정보통신연수소로서 총무성본성의 시설등기관으로 편성되었다. 또 통신종합연구소는 2001

년 4월 독립행정법인화로 탈바꿈하였다[4].

지방지분부국에서는 지방우정감찰국(10국), 지방우정국(11국), 우편국은 우정사업청의 지방지분부국으로, 지방전기통신감찰국(10국)과 오키나와 우정관리사무소는 총합통신국과 오키나와 총합통신사무소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병원 및 진료소, 직원훈련소의 우정연수소, 우정대학교는 우정사업청의 시설등기관으로 재편되었다.

Ⅲ. 우정사업의 민영화

1. 기존 우정사업의 문제점

우편은 개인이나 기업의 활동에 불가결한 수단이고, 근대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민주주의나 법치국가의 실현과 문화의 형성에 공헌하였다. 대다수의 국가들에서 <표 1>에서 보듯이 우편사업은 「독립채산·수지상각제」 하에서 국영·비영리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편저금과 간이보험은 380조 엔의 자금잔고를 포함해 일본인 전 개인금융자산의 3할을 초과하고 있다. 이 자금의 대부분은 「제2의 예산」화하고 있는 재정투융자의 재원이 되고 있다. 2001년 4월 우편저축 자금의 전액자주운용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우정사업청이 운용하는 우편저축자금은 지금까지 국채나 지방채, 특수법인을 향한 대부가 대부분이다. 우편저축의 적자는 표면화되고 있지 않으나 특수법인의 적자나 갈 곳 없는 국채·지방채가 되어 국민의 세금으로 되돌아온다.

1999년에 구 총무청이 우편, 우편저금, 간이보험 등 우정 3사업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감독의 보고서는 자민당의 유력한 지지 모체인 지방의 명사가 국장이 되고 있는 특정우편국 제도를 개정하도록 우정성에 권고하였으나 당시의 우정관료는 정치권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일축하였다. 구 총무청이 지적한 것은 특정우편국의 직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인해 비용이 많이 들어 경비절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대형소매점 등에 수수료를 지불해 창구업무를 위탁하는 간이우편국으로의 전환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2001년 1월의 중앙 성청개편에 따라 우정성은 총무성으로 변경되었으나 특정우편국 제도는 개정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아 있다[5].

고비용 체질을 꾀안은 우편사업은 2000년에만 100억 엔의 적자를 기록하여 3년 연속 적자행진을 계속하고 있는데 매출액은 2조 2400억 엔으로 정체 상태이고, 물품 구입비의 삭감이나 직원 보너스카드 등 지출억제에 노력한 결과 1999년도의 553억 엔 적자에 비해 적자폭은 축소되었다. 우편사업이 적자를 보는 것은 전자메일 보급 등으로 수요가 계속 감소하고, 서비스 개선이나 경비삭감을 추진하는 민간 택배업자와의 경쟁에 뒤진 데 기인한다. 이 결과 우편사업의 2000년 말 누적흑자도 피크인 1997년의 2500억 엔에 비해 절반 이하인 1200억 엔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우편저금 부문은 2000년에 1조 2969억 엔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우편사업과 마찬가지로 3년 연속 적자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반면, 간이보험 부문은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잉여금이 1736억 엔으로 나타났다. 우편저금과 간이보험자금 중 주식운용 등을 위한 신탁은행에 위탁하고 있는 규모가 27조 엔인데, 추가폭락으로 2001년 3월 말에 3조 8623억 엔의 평가손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국 19000개소에 달하는 특정우체국에서 국장 재량으로 자유롭게 사용하여 사실상의 관공비 역할을 하는 도체비(渡切費) 지출이 매년 900억 엔 이상에 달하여 자민당의 유력한 득표조직인 특정우체국장과 OB 조직에 대한 비판이 증대하고 있다. 근년에 우정 3사업의 적자체질이 현저해져서 우정사업 민

<표 1> 주요 국가의 우정사업 형태

국가명	우편	저금	보험
일본	국영	국영	국영
미국	국영(독립행정기관)	완전 민영화	완전 민영화
영국	민영화 추진중(특수회사)	완전 민영화	완전 민영화
프랑스	국영(공적법인)	국영(공적법인)	민영화 추진중
독일	민영화 추진중(특수회사)	민영화 추진중(특수회사)	완전 민영화(州營會社)
뉴질랜드	민영화 추진중(특수회사)	완전 민영화	완전 민영화

<자료>: 「朝日新聞」, 2001. 5. 17.

영화론이 힘을 얻고 있다.

우정사업에서 보면 전국에서 소포나 편지의 집배를 직접 다루는 곳은 대규모 우체국을 중심으로 약 5천 개로 전체의 1/5에 지나지 않는다. 집배를 다루지 않고 있는 특정우체국을 간이우편국으로 전환하고 통폐합해도 우정서비스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우정사업이 민영화된 독일에서는 1990년대 초반에 2만 5천 개 이상에 달했던 우체국을 10년간에 걸쳐서 1만 4천 개로 감축하였고, 국영공사가 우정사업을 담당하는 영국에서도 우편국 수는 감소경향이 있다. 반면, 일본에서는 수년간 매년 50개소씩 증가하여 세계조류에 역행하고 있다.

2. 고이즈미 내각의 우정민영화론

고이즈미 총리의 우정사업 민영화에 대한 소신이 명확히 부각된 것은 1992년 미야자와 내각의 우정상에 취임했을 때 기자회견에서 “일본 경제의 발전은 민간이 노력해서 성장해왔다. 우정의 일은 관업이 민업을 압박하고 있다. 마찰이 있는 부서지만 부서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이 우선이다”라고 주장하였고, 이것이 고이즈미 총리 일생의 테마가 된 ‘우정 3사업의 민영화’에 관한 첫번째의 공식 발언이었다. “우체국도 민영화되면 기업과 같은 노력을 하게 되므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일이 아닌가. 그것을 왜 하지 않는가”라는 주장이다.

또 기존의 우정성이 추진해 온 ‘노인우대’의 비파세 문제에 대하여 필요 없다고 주장하였고, 우편저금의 소액예금 우대는 반대한다며 우정성의 법안을 물고 늘어져 정무차관이 사표를 제출하는 등 기존관행에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 고이즈미의 우정 3사업 민영화는 우체국 창구에서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우편서비스’, ‘우편저금’, ‘간이보험’ 등 3사업을 민영화 하자는 것이다.

1995년 고이즈미가 처음으로 총재선거에 출마했을 때도 ‘우정의 민영화’를 논쟁의 초점으로 들고 나와 현역 총리였던 하시모토와 치열한 정책논쟁을 전개하였다. 1997년 2월 후생상으로 중의원 본회의에서 “야당인 신진당이 우정3사업의 민영화를 제출하

면 찬성할 것이다”라고 발언하여 궁지에 몰렸다. 1997년 가을의 중앙성청 재개편회의에서 고이즈미는 자신의 신념인 우정 3사업의 민영화를 주장하면서 당시 총리였던 하시모토에게 사임도 불사하겠다는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자, 하시모토 총리는 “왜 고이즈미는 한 가지 일에 이렇게 집착하는가”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렇게 정책면에 대한 고이즈미의 자세는 지금까지 일관해 온 ‘우정3사업의 민영화’와 ‘재정재건’이라는 두 기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 두 정책은 고이즈미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선이다(오가타 93-113).

고이즈미는 2000년 4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도 ‘우정 3사업의 민영화’를 내걸고 당선되었다. 4월 24일 고이즈미 총리는 ‘우정 3사업의 민영화’에 대해 “공사화 후에 검토한다”는 의견을 표시하고 “내년 우정사업에의 민간인 참여가 결정되는 시점에 언제 공사의 민영화를 실시할 것인가를 검토하겠다”고 민영화 검토시기를 발표하였다.

고이즈미의 우정 3사업 민영화 논리는 “옛날 민간기업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확실한 통신수단이나 적금수단으로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우정사업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민간기업이 성장한 지금 국가가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민의를 압박하는 것이고,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에게 맡기면 그만큼 세금이 들어온다. JR이나 NTT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정사업을 공사화한 후에 신속하게 민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4월 25일 자민당·공명당·보수당의 3당 당수회담에서 우정사업의 민영화에 대하여 「2003년도의 공사화를 실현하고 그 기본방향에 대하여 총리의 사적자문기관을 설치해 민영화 문제를 포함한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한다」고 결정하였다. 5월 7일 소신표명 연설에서 간관정책으로 내걸은 『우정 3사업 민영화』를 검토하기 위해 「조속히 사적간담회를 시작하여 국민에게 구체안을 제시한다」고 표명하였다.

민영화의 구체화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져 국민에게 공약실현을 향한 자세를

호소하기 위해 먼저 검토기관을 7월의 참의원선거 전에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우정민영화는 고이즈미 총리의 지론이나 중앙성청개혁기본법에는 「민영화 등의 개정은 행하지 않는다」고 명기되어 있어 검토기관은 총리직속으로 하면서 『사적간담회』로 한정시켜 「민영화를 포함한 검토」라는 표현을 취했다[6].

「공사화 후에 민영화를 검토한다」는 고이즈미의 일관된 구조개혁의 청사진은 우정사업이 민영화되면 거대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가고, 우편사업에 민간의 참여가 허용되면 새로운 고용도 창출된다. 또 2~3년 내에 은행의 불량채권 처리 등 긴급경제대책을 행하여 단번에 경제·산업재생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이즈미 총리의 우정민영화 논리의 배경에는 사회주의적 금융시스템화 하고 있는 재정투융자 자금을 유동화 하여 틀에 박힌 행정이나 특수법인의 뿌리를 근절하고자 한다. 목표로 하는 것은 재정개혁인데이를 위해서는 자금조달을 담당하는 우편저금 등의 개혁을 단행해야만 한다는 것이 그의 논리이다. 정부의 경제제정자문회의(의장: 고이즈미 총리)는 2001년 6월 하순에 정리한 경제·제정운영의 기본방침에 우정 3사업의 민영화를 담고 있다[7].

고이즈미 총리의 우정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정업무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력히 추구하고 있는데, 총무성이 경영지표를 공표하면 어느 곳의 우체국이 적자인가, 어떤 서비스가 적자인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어, 이는 사업효율화를 위해서 우체국의 통합이나 일부 서비스의 폐지 등으로 연결된다.

3. 현재까지의 우정개혁 현황

현재까지 결정된 우정공사의 개요는 1) 국가로부터의 독립채산제 도입, 2) 우편저금·간이보험의 보유자산 평가에 시가회계 도입, 3) 우편저금·간이보험의 자금은 전액 시장에서 운용, 4) 봉서·엽서의 일부 집배업무에 민간도 참여 등이다.

일본정부는 2001년 7월 현재까지 일본정부가 독점하였던 우편·우편저금·간이보험 등 우정관련 3 사업을 2년 뒤인 2003년부터 완전 개방하여 민간기

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이렇게 되면 미국과 같이 민간 업체들이 우편배달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총무성은 8월 중에 우정공사연구회를 발족시켜 연말까지 우체국 공사화 방안과 민간의 참여방안 등을 확정된 후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8].

당초 일본정부는 2003년까지 정부의 우체국 업무를 제한적으로 민영화할 계획이었다. 신용카드나 일정 두께 이상의 우편물 등에 대해서만 민간참여를 허용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는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민간에게 맡긴다”는 방침하에 총무성에 완전 개방안을 만들 것을 최근 지시하였다. <표 2>에서 보듯이 정부가 집배를 독점하고 있는 항목은 편지, 공공요금 등의 청구서, 디렉트 메일, 크레디트 카드, 지역진흥권, 기업 사내용 영업보고서, 표창장, 허가증이고 민간에 개방되어 있는 항목은 서적, 잡지, 신문, 우표, 지식 등 유가증권, 상품목록(카탈로그) 등인데 정부의 집배 독점 항목 중 크레디트 카드, 지역진흥권, 기업 사내용 영업보고서는 민간에 개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총무성은 우정공사가 설립되는 2003년을 목표로 우편의 요금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우편물의 중량에 따라 복잡하게 세분화된 현행의 요금체계를 대폭 간소화하여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새로운 우편서비스의 개발도 적극 추진할 예정인데 이는 민간 택배업자와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우편사

<표 2> 현행 국가 독점의 우편물과 민간 개방 품목

현재, 국가 집배 독점의 우편물	민간에 개방되어 있는 품목
편지	서적, 잡지, 신문
공공요금 등의 청구서	우표, 주식 등 유가증권
디렉트 메일	상품목록(카탈로그)
크레디트 카드(*)	
지역진흥권(*)	
기업 사내용 영업보고서(*)	
표창장, 허가증	

주) (*)은 독점 포기할 가능성이 높은 품목
 <자료>: 「日本經濟新聞」, 2001. 5. 11.

업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 1만 8천 개 소의 특정우체국에 운영비로 지급되고 있는 도체비 제도를 2003년도의 우정공사 설립 시에 폐지할 방침인데 이는 우체국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다[9].

우정 3사업이 2003년에 이관될 우정공사는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유 부동산의 매각을 인정하여 우체국의 통폐합이나 신규개설을 원칙적으로 자유화 할 방침이다. 또 면세되고 있는 고정자산세 등의 납부도 검토중이고, 경영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 부진한 우편사업을 손질하고, 민간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조건을 정비할 방침이다.

총무성은 우정사업의 적자축소를 위하여 현재 30만 명에 이르는 우정 3사업 직원수를 앞으로 5년 내에 2만 명 이상 삭감할 방향을 정하고 노동조합과 협의에 들어갔다. 조기 퇴직제도의 활용, 신규채용의 대폭 축소 등 우편, 우편저금, 간이보험 등 모든 분야의 사업에서 직원을 줄이고, 사업의 운영이 2003년 설립될 독립채산의 우정공사에 이행되는데 결부하여 경영합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능력급을 도입하는 등 임금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정할 것도 검토중이다. 그리고 총무성은 우정사업의 특수법인인 간이보험복지사업단을 2003년 3월 말에 폐지하고 동년 4월에 발족할 우정공사에 통합하는 방침을 세웠다. 동 사업단이 전국 116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숙박시설과 결혼식장, 연회시설 등의 운영사업, 우편저금·간이보험자금의 운용사업은 우정공사가 계승할 방침이다.

또 우정성은 2001년 7월 19일 2003년에 발족될 우정공사가 민간기업에 출자하는 것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우정공사가 국내외의 운송회사를 매입하기도 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전국 우체국의 네트워크를 보완하는 물류망을 형성하여 우편 서비스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변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IV. 우정개혁에 대한 반대와 향후 전망

1. 우정개혁에 대한 반대논리

우정관계자 및 우정노조, 우정족의원 등 민영화

반대론자들은 민영화를 할 경우 전국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우정사업청의 아시다치 쇼지로 장관도 “공평성을 전제로 효율성을 우선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총무성의 정책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자민당 총무부회의 아라이 히로유키 회장도 “민영화로 적자 우체국이 폐지되면 우정서비스에 지장을 준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당사자인 우체국과 총무성 내부에서도 “공사가 민간과 경쟁할 경우 수익성이 악화돼 서비스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럴 경우 민간기업이 시장을 넓혀 나갈 것이나 채산성을 내세워 농어촌 및 오지를 외면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당내의 우정족의원들과 체신노조의 지지를 받는 야당 중에도 반발의 목소리도 강하여 고이즈미 총리는 미묘한 방향타(키)를 잡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고이즈미 총리가 과거 우정상이었을 때 당시 우편저금의 소액예금우대에 반대하여 선거에서 강력한 집표머신이 되는 특정우편국장에 의지하는 우정족의원에게는 천적이다. 당연히 하시모토를 총리후보로 올린 우정족의 우두머리 노카 히로무 전 간사장과는 적대관계이다. 자민당 내 반대하는 의원들은 “우편저금은 국가의 보증이 붙어서 안전하고 현금을 자동적으로 예금하고 입금할 수 있는 ATM이 전국에 설치되어 있어 국민생활에도 매우 편리하다. 또 금리수준도 일반은행보다 높아져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고마운 존재”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해관계와 강력한 반대에 밀려 지금까지 우정사업 개혁이 수없이 부상하였으나 모두 정치문제화에 실패하였다. 1997년에 정부의 행정개혁심의회가 간이보험 민영화를 검토했을 때도 전국특정우체국장회 등의 반격으로 최종적으로 국영유지로 결착되었다. 1992년 12월 고이즈미가 우정상에 취임하여 우정 3사업의 민영화를 주장하자 그 당시 자민당 의원들 대다수가 반대했는데 그 이유는 우체국이 큰 표밭이었기 때문이다. 관료들이 퇴직 후 우체국에 한 자리 약속 받기 때문이라는 현실이 또 다른 이유다. 정치가의 입장과 관청의 이권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자민당은 업계단체를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정권을 유지해왔다. 특히 참의원 선거는 중의원과 달라서 개인후원회를 강화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업계단체에 의지하는 경향이 높았다. 최근에 자민당을 지지하는 각종 단체가 힘을 잃고 있는 가운데 변함없이 높은 집표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국특정우체국장회'였다. 참의원 선거의 경우 전국특정우체국장회에서 도, 도, 부, 현 별로 2만 표에 달하는 지방표를 모은다고 한다. 무당파의 표를 기대하지 못하는 자민당으로는 이 전국특정우체국장회의 표에 상당부분을 의존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2. 앞으로의 전망

이번 총재선거에서 지방의 자민당원들이 고이즈미를 적극 지지하였고, 장기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중견·중소기업 경영진도 일본을 개혁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고이즈미 총리의 개혁정책에 기대를 걸고 있다. 즉, "차입금을 늘려서는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국채발행을 억제하고 행정·재정개혁을 철저하게 해야만 한다"는 고이즈미의 의견에 찬성하고 있다. 오자와 이치로 자유당수도 우편저금과 간이보험의 민영화 방향에 동조하고 있다. 미야우치 요시히코 오릭스회장도 "대규모 사회주의금융시스템화 하고 비효율적인 국영대부기관이 되고 있는 정부계 금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의 제정(판단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며, 그렇게 하면 일본경제 전체의 파이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라고 우정개혁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10].

2001년 7월 요미우리 신문사가 참의원 입후보대상자를 상대로 실시한 우정민영화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8%가 민영화에 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5.8%가 「완전 민영화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정당별로는 공산당과 사민당은 0%, 자민당이 9%, 민주당이 14.8%, 보수당이 75%, 자유당은 48.2%, 자유연합은 76.2%가 지지를 표하였다. 「특정 분야만 민영화해야 한다」에는 전체 22.5%가 동의했는데 정당별로는 자민당이 35.8%, 공명당이 50%, 민주당이 39.3%로 가장 많은 지지

가 나왔다. 반면,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에는 전체 36.4%가 동의했는데 공산당이 100%, 사민당이 91.3%, 민주당이 19.7%, 자민당이 11.9%를 기록하여 후보자 사이에 우정사업 민영화 반대론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11].

고이즈미 총리는 "우정 3사업의 기본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완전히 터부였다"고 실토하고-"개혁에는 반드시 저항하는 세력이 나오나 기가 죽지 않고 결단코 개혁을 이끌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고이즈미 총리의 강한 개혁의지, 기업인과 국민의 높은 개혁에 대한 열망, 오자와 이치로 등의 동조 등 이전보다는 유리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해관계의 조정과 우정관료, 우정노조, 우정족의원 등의 반대를 극복하고 또 국민에게 받아들여질지가 우정개혁의 열쇠가 되고 있다[12]-[14].

V. 결론

본 고에서는 행정개혁과 우정성 개편을 중심으로 고이즈미 내각의 우정사업 민영화 방안을 분석하였다. 2001년 1월부터 시작된 행정개편에 따라 우정 3사업이 모두 총무성으로 이관되는데 우정사업은 우정사업에 관련되는 기획입안·관리를 소관하는 총무성 내부국으로서 「우정기획관리국」에서 관장하고, 실시사무는 외국(실시청)으로서 「우정사업청」이 관할한다. 이 우정 3사업은 2003년 4월에 발족되는 「우정공사」로 이행된다.

2001년 4월 고이즈미 총리 취임으로 우정 3사업(우편, 우편저금, 간이보험)의 민영화가 급류를 타고 있는데 우정사업의 막대한 적자와 비효율성, 민간택배업자와의 치열한 경쟁 때문에 민영화 논의는 세계와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일본정부는 우정사업의 민영화로 막대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가 2~3년 내에 은행의 불량채권 처리 등을 해결하여 경제 재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우정사업의 개혁방향은 국가로부터 독립채산제를 도입하고, 우편저금·간이보험의 보유자산 평가에 시가회계를 도입하며, 우편저금·

간이보험의 자금은 전액 시장에서 운용되고, 봉서·엽서의 일부 집배업무에 민간도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고이즈미 총리의 강력한 개혁의지, 재계와 국민의 개혁에 대한 지지 등으로 우정사업의 민영화 논의는 이전보다 유리한 상황이나 우정관료, 우정노조, 우정족의원 등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아직도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참 고 문 헌

- [1] 하원규, 김웅희, “일본정부의 2000년도 고도정보화 기본전략 및 행동계획 분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경영연구시리즈 00-04, 2000. 9.
- [2] 郵政行政研究會, 日本の郵政, 2000.
- [3] 中央省廳改革研究會, 中央省廳改編, 2000.
- [4] 國政情報センター, 省廳再編, 2000.
- [5] 田中一昭·岡田彰, 中央省廳改革, 日本評論社, 2000.
- [6] 오가타 구니히코, 윤기 역, 궤차총리 고이즈미, 흔들리는 일본, 예지, 2001.
- [7] 朝日新聞, “郵政民營化檢討明記,” 2001. 6. 12.
- [8] 日本經濟新聞, “郵便局廢止・新設自由化,” 2001. 8. 7.
- [9] 日刊工業新聞, “郵政3事業民營化,” 2001. 4. 27.
- [10] <http://www.kantei.go.jp/jp/yuusei3jigyoudai/1siryou.html#1111>
- [11] 讀買新聞, “郵政民營化, 參院選候補豫定者48%贊成,” 2001. 7. 11.
- [12] 동아일보, “일본 21세기 도전,” 2001. 2. 3.
- [13] 조선일보, “일본 중앙부처 통폐합,” 2000. 12. 7.
- [14] 중앙일보, “일본 우정사업 민간에 개방,” 2001. 7. 9.